

패스트트랙 기간 90일로 줄이고 특별감찰관 10년만에 부활

국회 본회의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추천안 확정
용산공원특별법은 다음주로 연기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또한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최길수·강지식·최홍훈 변호사 추천안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며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됐다. 이에 8월 첫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됐다.

민주당은 야당에 의한 입법 지연을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발의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1로 낮추고, 필리버스터 중 재석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시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인 법안도 지난달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로 회부됐다. 아울러 상임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경우 위원장을 강제 교체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회에서 세 명의 후보 추천안이 의결됨에 따라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도 곧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리를 감

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사임한 뒤 10년간 공석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60·사법연수원 23기)로,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60·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

훈 변호사(54·사법연수원 27기)를 추천했다. 세 후보 모두 검사 출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격을 검증할 예정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여야간 합의했거나 이견이 작은 법안 70여건도 처리했다. 통과된 법안 중엔 기업이 기술유용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해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의 처리 안건으로 예상됐던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조율 중임을 고려해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캠프킴(전 주한미군 주둔시설) 등 복합시설 조성 지구엔 공원이나 녹지 기준 대신, 유연하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올해 1·29공급대책에서 용산 캠프킴 공급물량을 1100호에서 2500호로 늘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공원특별법과 함께 다음주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도시재정비특별법 개정안도 다음주 처리를 노린다.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는 내용이고, 도시재정비특별법(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구윤철 “주택 세제, 보유보다 실거주 중심”

(경제부총리)

비거주 1주택자 불이익 최소화
2029년부터 실거주 요건 강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일 주택 수 중심의 과세에서 실거주 및 주택 가액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전환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거주 사유가 된다면, 그 부분은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시켜서 거주용 주택으로서 정착하는데 뿌리 내리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호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세제개편안에 영향 받는 비거주 1주택자의 규모를 정부가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구 부총리는 “비거주 하는데 취학, 해외 거주 등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인정을 해준다. 주택을 보유하지만 해도(공제 등)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이는 거주용 주택의 정상화가 아니라는 생각”이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금까지) 주택을 보유만 해도 50%까지 공제를 받기 때문에 다 보유를 하다보니 수도권 풀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다.

정부의 내년도 부동산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을 오래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2029년부터 실거주를 해야 혜택을 받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뀐다. 정부는 이러한 양도세 개편을 통해 비거주 1주택을 최대한 팔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수도권 아파트의 실거주 수요를 높여 전셋값 상승과 전세 매물 급감을 불러와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세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아니다. 주택 보유(위주의) 인센티브 스킴(제도)을 거꾸로 주는 것”이라며 “(주택을) 들고만 있어도 혜택을 받으니까 (수도권에 보유를 하기 위해) 그러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들) 절대 가볍게 보지 않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억원 이하 주택에 세금을 깎아주고 시가 20억원 주택의 종부세를 면제하는 등 다양하게 했다”고 부연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올해 건여들이는 추가 세수를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에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공격 주택의 추가 건설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부족하고 더딘 상태”라며 “돈이 없어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지나 절차적 문제의 병목이나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로 편성 검토 중인) 미래대응기금에도 청년 분야가 있으니 주택 공급을 위해서 당연히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전체회의가 열렸으며 질의에 불참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소위원장인 선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기재위 위원장을 맡은 최근 3번, 예외 없이 예결소위원장은 모두 민주당에게 줬다”면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재경위 위원장을 맡았는데, 예결소위 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한다. 다수당의 몫이라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부의 세제와 재정, 예산과 기금운용을 감시해야 할 예결소위까지 여당이 맡겠다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박태홍 기자

李 “불공정과 싸움 중단 없는 민생개혁”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20일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 잡는 중단 없는 개혁이 더 없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의 연대와 신뢰가 굳건해지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도 더 탄탄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창한 구호나 목표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를 들면 범정부 합동 대응단 출범 이후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 이런 성과를 사회 전 분야로 꾸준히 확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매점매석, 담합, 주가조작, 국고 부정수급 같은 경제질서 교란 행위와 디지털 성범죄, 마약, 중대재해, 공직 부패 등은 국민의 삶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개혁은 국민 삶의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때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중단 없는 개혁, 나아가 지속적인 민생 개혁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440여 일이 지났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모르겠지만 저는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고 생각한다”며 “임기 초반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정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은 국가대오의 발판을 마련한 큰 성과도 있었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안규백 장관 “北 핵무기 80~120개 추정”

(국방부)

“핵보유 공식적으로 인정 못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북한 핵무기 수량에 대해 “보통 80~120개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몇 개 정도 했다고 우리 정부는 평가하느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

한이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숫자가 약간 상이한거 같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보수집단이나 연구기관에서 대략 57개로 발표한 것”이라며 “이를 한국 국방부장관이 논평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거 같다”고 부연했다.

안 장관은 또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저는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에도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이 북한 핵무기 수량을 재차 물었고, 안 장관은 본인의 80~120개 발언에 대해 “국내 연구기관의 평가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도 “장관이 언급한 북한 핵무기 수량은 국내 연구기관이 추정한 수량을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 “화전양면(和戰兩面) 작전을 구사하

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고 평가했다. 화전양면은 앞에서는 평화를 제안하면서도 동시에 뒤에서는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을 말한다.

안 장관은 또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 우리도 핵 개발을 해야 하느냐는 성일종 의원 질문에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 없다”며 “미국의 전술핵도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북한과의 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에는 “그래서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받는 정책으로 우리가 일관되게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뉴시스